

4월혁명과 지식인 여성

— 반독재와 여권신장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다 —

최 종 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4월혁명과 지식인 여성

- 반독재와 여권신장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다 -

최 종 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01

4월혁명기 지식인 여성은 어디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아래로부터 저항에 의해 회복된다!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1960년에 발생한 4월혁명이다. 올해는 그 4월혁명이 60주년 되는 해이다. 당시 스무 살의 청년은 올해 80세의 노인이 되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과거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할 현재이자 미래다.

60여년의 세월동안 4월혁명은 다각도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월혁명의 새로운 주체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4월혁명은 한때 ‘4·19학생의거’라고 불렸을 정도로 학생, 특히 서울의 대학생이 주축이 된 혁명으로 기억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지역에서의 의거들, 중고등학생, 구두땀이와 같은 기층민중이 대학생만큼이나 중요한 ‘주체’들이었음을 보여주었다.¹⁾ 기층민중의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졌던 이유는 엘리트 지식인처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상징자원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4월혁명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4월혁명의 주체는 오랫동안 지식인 청년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4월혁명에 여중고생, 여성노동자, 성매매 여성, 게다가 할머니들까지 적극 참여했음이 밝혀졌다.²⁾ 4월혁명의 주체에 기층민중이 삭제되었던 만큼이나 여성 역시 삭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주체가 발굴됨에 따라 4월혁명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민항쟁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그런데 4월혁명과 여성의 관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최근 4월혁명의 참여자로 발굴되고 있는 여성은 여중고생 내지는 기층여성들이지 지식인 여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층민중과는 달리 지식인 여성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언어와 상징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1960년 당시 지식인 여성은 나름대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4월혁명 참여자 명단에 지식인 여성이 부재하다면 그것은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 스스로의 불참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1) 예를 들면 이승원. 2009. “‘하위주체’와 4월 혁명: ‘하위 주체’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기억과전망』 20호, 오제연. 2014.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역사비평』, 유명철. 2018.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57(1) 등을 들 수 있다.

2) 대표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펴낸 『4월혁명과 여성』(2010, 선인)이 있다.

그렇다면 4월혁명기 지식인 여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³⁾

일찍이 여성학자 이효재는 4월혁명과 여성의 관계와 관련, “그 당시 여성단체들은 소외된 방관자로서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었다. 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을 타도하는 데모대열에 일부 여학생들이 참여, 사상자 명단에 소수가 끼긴 했지만 이것은 여성계의 집합된 의지를 대표하는 입장이기보다 개인적 참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⁴⁾

여중고생 내지는 도시하층 여성들의 참여를 개인적 참여에 ‘불과’했다고 본 이효재의 평가는 오늘날 재고의 여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효재가 본질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바, 즉 당시 ‘소외된 방관자’였던 여성단체들, ‘여성계의 집합된 의지의 부재’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살아 있다.

부당하게 삭제되어 버린 과거를 발굴하고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존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과거를 되새기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일 역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4월혁명기 지식인 여성의 ‘침묵’이라는 여성운동계의 ‘흑역사’를 반추해 보는 일은 지식인 여성의 역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 충분히 의미있을 것이다.

3) 이글에서 ‘지식인’ 여성은 기층민중과는 달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상징자원을 지닌’ 여성으로 여성지도자(정치인), 여성단체, 여성운동세력, 여대생과 같은 성년의 인텔리 여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4) 이효재, 1985. “여성과 4.19.” 『실천문학』. p. 306.

02

주류 여성운동세력: 독재정권과
결탁을 통한 여권개선운동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지니면서 동시에 ‘여성계의 집합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지식인 여성 집단이 있다면 단연 여성운동단체들이다. 오랫동안 1950년대는 ‘여성운동의 암흑기’로 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⁵⁾ 최소한 ‘여권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여성운동이 부재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시 여성운동세력의 주류는 우파 여성운동세력이었는데 이들의 뿌리는 한국 여성운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근우회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조직된 근우회는 좌우파 여성운동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여성해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내걸고 있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근우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역시 좌우합작 형태로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그러나 건국부녀동맹이 사실상 좌파 여성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자 우파 여성 인사들이 탈퇴, 새롭게 전국여성단체총연맹을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파여성 인사들만의 독자적인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이들은 나름의 조직화를 이루고 여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승만정권 시기 우파 여성운동세력의 중요한 운동목표 가운데 하나는 법제정운동이었다. 당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YWCA, 여성문제 연구원과 같은 여성단체들은 남녀평등원칙에 입각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연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갔다. 또한 1953년 가족법 제정시기에는 호주제 폐지, 혼인관계, 양자문제, 친권문제, 재산상속문제 등 5개 항목과 관련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⁶⁾ 2005년에야 비로소 관철된 호주제 폐지 등 지금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획기적인 의견들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밖에도 대한어머니회와 대한여자의사회 등은 당시 여성들의 출산억제욕구를 반영하여 출산조절 보급운동을 펼쳐나갔다.⁷⁾ 선거시기에는 여성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여권개선안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자는 여성유권자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⁸⁾

5) 이승희. 1994.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p. 22.

6)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6(2). pp. 78-9.

7) 배은경. 2012. “1950년대 한국사회의 출산통제 여성운동.”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8) 정현백. 2006. “한국의 여성운동 60년: 분단과 근대성 사이에서.” 『여성과 역사』 제4집. p. 9.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활동들이 대부분 이승만정권과의 결탁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애초 1946년 좌파여성세력과 결별했을 때 우파여성세력은 친일경력 등으로 인해 좌파세력에 비해 대중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승만정부와 결탁함으로써 이러한 열세를 만회해 나갈 수 있었다. 우파 여성운동세력은 수시로 이승만정권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1960년 3·15선거에서도 대표적인 우파여성단체인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자청년단은 부통령 후보 이기붕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⁹⁾

따라서 4월혁명기 이들은 혁명의 주체라기보다 ‘타도’의 대상에 가까웠다. 실제 4월혁명 직후 대한부인회 간부 대부분이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원민주화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는 ‘대한부인회 혁신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민주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¹⁰⁾

이승만정부와 직접적으로 결탁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여성단체들은 이승만정부의 독재정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승만의 하야 이후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임시총연합회를 결성하고 7.29총선에서 축첩자에 대해 일종의 낙선운동을 펼침으로써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적 차원에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효재의 지적처럼 이 시기 여성운동은 “결혼과 가정 생활의 민주화”에 기여했을지언정 “사회의 민주화와 연결시켜” 스스로를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¹¹⁾

9) 윤정란. 2010. “4월혁명과 여성들의 참여양상: 여성신생활운동과 장면정권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혁명과 여성』. 선인. p. 253.

10) 『동아일보』(1960/05/17). “수습대위구성 대한부인회.”

11) 이효재. op. cit. p. 307.

03

타도의 대상이 된 여성지도자들

한편, 당시 정관계에도 상당한 여성들이 진출해 있었다. 당시 주류 여성운동세력은 정치참여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고 미군정 뿐만 아니라 이승만정권 역시 여성을 주요 관직에 등용했다. 대표적으로 여성 관료라는 말도 생소했던 당시 미군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담당 행정조직인 부녀국을 신설했다. 부녀국장에는 여성만이 오를 수 있었고 인사권도 주어졌는데 이로써 여성 몫의 관직이 마련된 셈이다.¹²⁾ 부녀국장에는 1946년 고헌경 초대 부녀국장을 시작으로 박승호, 유각경, 이예행, 김순화, 박인순 등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교육자나 단체인사들이 직위에 올랐다.

이승만정권 시기에는 부녀국 이외에도 고위공직에 여성이 등용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몇몇 예를 들더라도 임영신은 1951년 초대 상공부장관에 올랐고 김활란은 공보처장이 되었으며 박현숙은 무임소장관이 되었다.¹³⁾ 오랫동안 부녀국장만이 정부내에서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 여성직책이었고 군사독재시절을 통틀어 여성장관의 수는 1명에 불과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여성의 입각은 언제나 ‘파격’으로 통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여성들의 공직진출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여성담당 행정조직으로서 부녀국은 그 위상이 늘 불안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창제 폐지에 앞장서고 여성지도자 양성 및 계몽 활동 등 여권신장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이어나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위공직임에도 여성지도자들의 역할은 꽃다발 증정이나 격려와 같은 단순업무에 불과하거나 이승만의 독재정치에 협력하고 반공교육에 여성들을 동원하는 일이었던 것도 사실이다.¹⁴⁾ 게다가 몇몇은 이승만정권 하에서 부정부패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전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만 확대시켰다. 아닌게 아니라 4월혁명 직후에는 이승만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와 이기붕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가 나이든 남편과 병약한 남편의 배후에서 권력을 좌지우지했다는 비난담론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¹⁵⁾ 이러한 평가는 비단 남성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여성 지식인 사이에서도 다음과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기사화될 정도였다.

12) 황정미. 2002. “해방 후 초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여성(1946~1960): 부녀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09. pp. 167-188.

13) 김은실·김현영. 2012. “1950년대 1공화국 국가건설기 공적영역의 형성과 젠더 정치.” 『여성학논집』 제29집 1호. p. 132.

14) 김지연. 2019. “독립운동가 출신 여성정치가 박현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0. pp. 273-4.

15) 『경향신문』(1960/05/19). “한국을 지배한 두 여인 프란체스카와 박마리아.”

“이번의 의거사건은 남성들의 관육과 간계로 인한 역사적 결산이었지마는 그 뒤에서 유혹의 무서운 손길을 뻗치게 협력한 자들은 부끄럽고 마음아프나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 우리 여성들은 젊은 학도들의 피의 교훈으로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씻고 그 제단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써 맹세하고 새역사 창조에 적은 힘이라도 바치는 아내되고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¹⁶⁾

정치참여의 방법에는 독재정권이나 여당이 아닌 야당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당시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여성인사들은 입각을 하거나 여당을 선택했다. 그나마도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여성이 당선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표 1〉 참조).¹⁷⁾ 그리하여 1960년 4월혁명기인 4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고작 3명이었고, 그 가운데 두 명(김철안과 박현숙 의원)은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던 자유당 소속이었다.

〈표 1〉 1~2공화국 국회의 여성의원 수와 비율

	1948(1대)	1950(2대)	1954(3대)	1958(4대)	1960(5대)
의원총수(명)	200	210	203	233	233
여성의원총수(명)	1	2	1	3	1
여성의원비율(%)	0.5	0.9	0.5	1.3	0.4

결국 당시 정계에 진출한 여성인사들 가운데 이승만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은 야당인 민주당의 박순천 의원 한명에 불과했다. 그녀는 4월혁명기 야당 여성지도자에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천했다. 그녀는 장면 부통령 후보의 정견발표회장 마다 참여하여 찬조연설을 했으며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부정선거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혁명 후인 1960년 7월 29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여성후보로 유일하게 박순천만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순천 한 명으로 무너진 여성지도자의 위신을 다시 세울 수는 없었다.

16) 『동아일보』(1960/04/30). “여성들이여 잠을 깨자, 특히 위정자의 아내들에게.” 글쓴이는 연세대학교 여학생 과장.

17) 김지연. op.cit. p. 276.

04

좌파여성세력의 부재

그렇다면 주류 여성운동세력을 견제할 만한 좌파 혹은 대안적 여성운동세력은 있었을까? 아쉽게도 4월혁명기 좌파 여성운동세력의 활동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쇠락, 소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근우회와 건국부녀동맹에서 좌파여성인사들은 우파여성인사들과 함께 활동했다. 그러다가 건국부녀동맹에서 우파여성들이 탈퇴한 이후 건국부녀동맹을 조선부녀총동맹(이하 부총)으로 재편하고 전국노동자평의회나 전국농민조합총연맹과 같은 조선공산당 외곽단체로 편입해 들어가게 된다.

부총은 한때 그 조직규모가 150개의 지부, 80만명의 회원을 갖는 전국적 규모의 대중조직이었다. 부총은 여성해방과 함께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국가건설을 동시에 지향했다.¹⁸⁾ 만일 부총이 이승만정권시기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면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여성의 집합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47년 중반 이후 미군정이 좌익사회단체를 불법화시키고 부총 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을 대량 검거함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후 남한단독정부수립,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파여성운동세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사실상 그 세력이 유명무실해지고 만다.¹⁹⁾

18) 문지현. 2017. “해방 후 좌익계 여성운동의 방향과 한계: 잡지 『여성공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 p. 251.

19) 정현백. op. cit. p. 4.

05

새로운 세대 지식인 여성,
여대생의 참여는 있었으나...

더군다나 떠오르는 세대인 여대생에게 대안적 여성운동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여대생들은 4월혁명에 적극 참여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4월혁명 당시 대학생은 4월 18일 이후에야 비로소 참여를 본격화했던 만큼 여대생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다만 당시 대학생이 소수의 초특급 엘리트였고 여대생은 남대생보다 수적으로 더욱 적었던 시대였던 만큼 데모에 참여한 여대생의 수도 그만큼 더 적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한 4월혁명 당시의 구술자 총 126건 가운데 여성은 4명이며 그 가운데 여대생은 1명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그대로 당시 데모 참여비율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수적으로 매우 적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효재의 지적처럼 ‘이대생=여대생’, ‘이대생의 불참=전체 여대생의 불참’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다.²⁰⁾ 실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면 4·19 데모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모금을 결의한 7개대학안에는 숙명여대가 포함되어 있었다.²¹⁾ 또한 숙명여대 국문과 4학년 손재희는 4월 19일 데모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부상당했음을 증언하고 있다.²²⁾ 서울문리사대의 영문과 학생이었던 오영숙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데모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구술하고 있다.²³⁾

이러한 여대생들의 참여는 4월혁명 직후에는 좀더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승만 하야 후 학생들은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했는데 여자대학교였던 수도여자사범대학, 숙명여자대학, 효성여자대학 역시 여기에 동참했다.²⁴⁾ 7월 29일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국민계몽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서울대 여학생들은 독립적으로 <국민신생활운동반>을 조직, 약 200명의 여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동했다. 이들은 7월 28, 29일 양일간은 전원이 동원되어 각지방에서

20) 이효재. op. cit. p. 306.

21) 『동아일보』(1960/04/23). “앉아서만 볼 수 없다.”

22) 『동아일보』(1960/04/26). “나는 증언한다. 4.19데모 부상자(2).” 다만 같은 기사에 실려 있는 서울문리사대와 연세대 남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 집단적으로 데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숙대 학생은 개인적 참여인 것으로 보임.

23)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7>.

24) 윤정란. op. cit. p. 235.

공명선거운동에도 참여했다.²⁵⁾

다만 이러한 여대생의 활동에서 사회민주화의 의지는 엿볼 수 있지만 ‘여성계의 집합된 의지’를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4월혁명에 참여했던 여대생들과 그 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시작된 여성운동 간의 관련성을 찾기도 어렵다. 4월혁명의 주체로 거듭난 (대)학생들은 학생운동의 시대를 열어젖혔지만,²⁶⁾ 여성운동은 그로부터 10여년의 시간이 더 지난 후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부터 시작됐다.

25) 『경향신문』(1960/07/07). “또 다시 빛나는 조국에의 열의.”

26) 이호룡·정근식 엮음. 2013.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참조.

06

정치사회 개혁(민주화)없는
여성해방은 맹목

4월혁명기 주류 여성운동세력은 1950년대 동안 여권개선을 위해 나름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독재체제와 결탁함으로써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여성지도자들은 부정부패에 가담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대시켰다. 독재체제와 결탁하지 않은 여성단체들도 독재정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독재정치를 제어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류 여성운동에 대항할 대안적 여성운동은 부재했으며 새로운 여성운동 세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 결과 4월혁명 참여자 명단에서 여성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4월혁명은 남성들의 혁명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기층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상징자원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면 지식인 여성은 타도의 대상이었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으로써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화되던 여성들의 사회참여, 발언권은 4월혁명을 경유하면서 꺾였고 이후 '여성은 가정으로!'라는 주장이 세를 얻어나가게 되었다.²⁷⁾ 물론 사태가 이렇게 된 일차적 책임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엘리트 남성들에게 있다. 그러나 온전히 그들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다. 4월혁명기 이래로 정치사회 민주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던 조직화된 지식인 여성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얼마 전 끝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후보 비율은 1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물론 여전히 OECD 평균인 27.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서 여성대표성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는 일만큼이나 여성리더십의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여성 그 자체만으로 여권신장에 기여하는 정치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 여성지도자가 오히려 여권을 후퇴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여권신장이라는 목표와 정치사회 개혁이라는 목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여성해방 없는 정치사회 개혁(민주화)이 공허할 수 있듯 정치사회 개혁(민주화)없는 여성해방이라는 목표 역시 맹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4월혁명기 지식인 여성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

27) 추선진, 2018. "4.19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 연애/가족 서사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3). 57-80, p. 61.

4월혁명과 지식인 여성

– 반독재와 여권신장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다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4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